

### 광주시의회 무등산 조례안 통과



13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 앞에서 무등산 조례 제정과 관련해 찬반 시민단체들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조례가 통과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케이블카·온천 개발 주목

### 11개월 논란 시의회 '비밀 투표' 처리 환경단체 "1만명 서명 받아 폐기 청구"

‘친환경 자원 활용인가, ‘환경 파괴의 서막인가’

무등산 개발 근거를 담은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하 무등산 조례)이 11개월간의 논란 끝에 13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등산 자연경관을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무등산 조례’의 진기록=무등산 조례는 광주시의회 의정활동에서 갖가지 진기록을 남겼다.

지난해 8월19일 광주시의회 이철원(북구5)·송재선(서구1) 의원이 공동 발의한 ‘무등산 조례’는 상임위 상정-계류-수정의결-본회의 상정-의결보류-의결 재보류-본회의 의결 등 11개월간의 진통 끝에 제정됐다.

하지만 발의 의원과 시민·환경단체의 갈등으로 시작된 무등산 조례는 광주시의회와 시민·환경단체, 시민·환경단체와 또 다른 시민·환경단체로 전선이 확대되더니 급기야 의원간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광주시의회는 확산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무등산 조례를 강행

처리, 통과시켰다. 조례 제정을 놓고 무기명 비밀투표한 것은 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조례 제정 따른 무등산 변화=그동안 논란 과정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핵심 쟁점사항으로 부각됐다.

지난 2007년 10월 광주시의회 제163회 본회의에서 무등산 조례를 발의한 송재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 본격 거론됐다. 앞서 박광태 광주시장도 2007년 6월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 ‘케이블카 설치’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관심거리는 한 개발업체에 의해 20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운림온천 개발’이다. 운림온천 개발은 ‘무등산 제1수원지 인근에 호텔과 온천장을 짓겠다’는 것으로 지난 1990년 추진 이래 아직도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등산 생태 테마파크’ 조성도 거론된다. 문화와 관광을 연계해 아시아 문화수도라 원위 하자는 논리다. 또 초·중·고 수확여행 코스로 개발해 경

제적 수익을 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환경단체 강력 반발=무등산 개발에 의한 환경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례에는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개발할 지 규정돼 있지 않다. 조례에는 단지 개발 주체는 시장이고 시장은 광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조례에 의해 새로 신설되는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이들 위원회는 광주시에서 위원을 선임하기 때문에 시의 개발 계획을 제어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이들 위원회만 거치면 무등산 어디에, 어떤 것이나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환경단체들은 무등산 조례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무등산관광개발 조례 제정 반대 시민회의는 “조례 폐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해 규정돼 있다. 유권자의 1%이상 서명을 받으면 조례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시 유권자는 104만명 정도로 1%면 1만여명의 서명만 받으면 가능하다. 또 이들 단체는 조례 제정을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낙선 운동을 펴겠다고 경고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한·EU FTA 대책 낙농·삼겹살 집중

### 정부 “품목별 영향 분석중”...대규모 지원책은 없을 듯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3일 타결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FTA 등 주요 통상 합의가 있을 때마다 메가톤급 대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품목별 영향을 분석 중이다. 전문가들은 EU가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낙농과 삼겹살 분야가 대책의 골격을 이룰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미 FTA때 21조 지원책 마련=정부는 이미 2004년 5월에 다자 차원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물론 칠레와의 첫 FTA 등에 따라 개방에 대비, 2013년까지 119조원을 투입하는 농업·농촌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수산업도 같은 기간 12조4천억원의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미 FTA가 타결된 이후인 2007년 6월에는 농업 20조4천억원, 수산업 7천억원 등 모두 21조1천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2017년까지의 사업이지만 아직 협정이 발효되

지 않은 만큼 직접 피해보전 대책의 상당수는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대책의 내역을 보면 농수산업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에 1조3천억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7조1천억원, 구조개선에 12조7천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경쟁력 강화에 드는 비용이 훨씬 많다. 올해 지원 예산은 1조4천억원 규모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이 경쟁력 강화사업의 사례로 꼽힌다.

◇“품목영향 분석중”...낙농·삼겹살에 주목=이런 사례에 비춰 한·EU FTA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도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부처별로 품목별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피해 예상 품목은 낙농산업과 돼지 사육 농가가 거론된다.

유럽이 낙농제품의 생산기술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어 국내 산업이 위축될 여지가 있는데다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 34만 가운데 EU산이 13만8천이었던 때문이다.

특히 EU산 삼겹살의 가격 경쟁력은 막강하다. 2007년 기준으로 EU산 냉동삼겹살 가격은 국내산 도매가의 절반 수준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의 방향에 대해 “기존 FTA 대책을 기반으로 대응하되, 품목별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는 식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EU의 농산물 경쟁력이 미국보다 못 미치는데다 이미 한·미 FTA 보완대책이 마련돼 있는 만큼 중복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책이 검토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처럼 대규모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셈이다.

대책이 나오는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빨라야 협정문이 공개되는 오는 9월의 가서명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식 서명이 이뤄질 내년 2월 이후에도 나올 수도 있다.

### 한·EU FTA 남은 절차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13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내년 상반기중 발효시키려면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가서명 후 정식서명을 하는 일반 하더라도 빨라야 내년 초에 가능하다. 양측은 먼저 가서명을 위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가서명에 앞서 1천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면서 교정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양측은 7월 말과 8월 말 두 차례 법률검토 회

### 7월·8월 두차례 법률 검토 후 9월중 가서명

의를 가진 후 9월 초 검토작업이 끝나면 9월 중 가서명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가서명이 끝나면 현재 영문으로 된 협정문을 해당국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뒤따른다. 우리나라는 한국어로만 번역하면 되지만 EU는 23개국 언어로 번역해야 해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9월 중 가서명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정식서명은 내년 1월이나 2월이 돼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정식서명 전에 우리나라는 국무회의 의

결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받고 EU는 EU 이사회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식서명이 이뤄지면 양측 내부의 비준 절차가 개시된다. 우리나라는 정식서명 후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하지만 비준 시기를 장담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처럼 정치쟁점화될 경우 비준시기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연철뉴스

## “영산강 살리기 이미 했어야 했던 사업”

###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생태공원 조성 현장 방문

윤증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영산강 살리기는 예산만 있었으면 옛날에 해야 했을 프로젝트(오히려)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윤 장관은 “영산강 살리기는 준설로 유량을 확보하고 주변의 친환경적 경관과 조화를 이뤄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낮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의 강, 하천 등에서 홍수 등 재해 대책비로 연간 4조3천억원이 소요되고 4대강에만 2조7천억원이 투입된다”며 “3년에 걸쳐 이뤄지는 4대강 프로젝트는 평소 투입해야 할 예산이면 충분하거나 오히려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 장관은 이날 오전 박준영 전남지사 등과 함께 나주시 금천면 영산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영산강 현장을 둘러본 윤 장관은 “치수, 치수사업은 국가의 근본인데 너무 방치됐다”고 지적한 뒤 “다소 늦었지만 사업이 잘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이광형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윤 장관에게 영산강 주변 고수부지 농토에 대한 보상을 정부 차원에서 해줄 것과 홍수 예방을 위해 셋값을 정비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또 F1(포물러인) 국제자동차경주



대회 경주장 건설비 조기 지원,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 사업지구 진입도 로 개설 국고지원, 여수 엑스포 관련 SOC 사업비와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사업비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윤 장관은 경기 회복 전망에 대해 “국내의 경제 지표와 재정 조기 집행 등 적절한 조치, 기업과 금융기관의 탄탄한 재무구조 등 긍정적인 면을 감안해도 아직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낙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담배소비세 확대 움직임 등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7~8월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홍철기자 redplane@

Advertisement for 'SeGIS' (세기스타) and 'SeGIS' (세기보청기)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and text in Korean. The text includes '대한민국 보청기의 자존심' and '세기보청기'.